

4·3특별법 또 난관 봉착

17~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처리 무산
기재부 등 “형평성·배보상 따른 재정부담” 난색
정부는 국회에 공 넘기고 국회는 결단없이 눈치만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핵심 조항인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정안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와 국회의 결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처럼 법안 심의는 공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거대 여당이 등장한 뒤에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의했

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는 빈손 종료했다. 행안위는 여야와 부처간 추가 논의 후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전면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소극적인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일괄 추진함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도 “제주4·3사건에 대한

개별 보상 규정은 타 과거사 피해와의 형평성, 재정부담,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액 규모 및 기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확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리 여야 모두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는 등 협의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기고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4·3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구제절차는 72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는 1999년 특별법 제정 당시 제기됐음에도 진상 조사 이후로 미뤄졌고, 진상조사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이는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4·3학계의 지적이다.

국회·부미현기자



18일 제주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 관계자 등이 4·3 희생자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현장최고위 어제 제주 방문

“4·3특별법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목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제주를 찾아 “4·3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처절한 현대사인 4·3의 고통에 늘 가슴이 아린다”며 “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총리시절 제주에 와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 쏟겠다”며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이 대표발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4·3특별법 심사가 이처럼 속도 있게 진행되는 것은 당 지도부의 의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민의 힘을 모아 노력해 정기국회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자치경찰 존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 유치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제주는 노무현 정부때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만큼 기

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존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 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방문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형 뉴딜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 자유화를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조석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한국판 뉴딜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관광객들 밤에 가고싶은곳은...

도·제주관광공사 조사결과 ‘해변·해안’ 선호

우선사업 대상지 2곳 선정

제주 방문 관광객들이 야간관광 적합 장소로 ‘해변 및 해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8일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 방문 관광객 대상 야간관광 인식 설문조사 결과 야간관광 적합장소 및 선호 장소는 ‘해변 및 해안’이 50.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선호 유형으로는 경관 관람형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야간관광 추진 적합지역 분석에서는 제주북부해안도로, 제주시 원도

심, 서귀포 해안권, 서귀포 원도심, 성산일출봉 등 5지역이 도출됐으며, 이중 ‘제주북부해안도로’와 ‘서귀포 해안권’ 2지역이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추진 적합지역은 도내 관광자원,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실태분석과 지역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제주 방문 관광객 대상 야간관광 인식 설문조사, 추진 적합지역 주민 대상 야간관광 인식 설문조사, 주민 FGI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추진 적합지역 주민 대상 야간관광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야간 관광 지지의사, 협력의사, 긍정적 영

향 인식 등에서 ‘제주북부해안도로’와 ‘서귀포 해안권’ 주민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야간관광 추진 적합지역의 기본 콘텐츠와 더불어 지역별 주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선사업 추진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추가 개발해 총 31개의 콘텐츠를 단·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단기사업으로는 나이트마켓 운영, 스트리트 사이니지 설치, 선상 야경투어 등이, 중기 사업으로는 나이트 가든, 나이트 로드 조성 등이, 장기사업으로는 야간조형공원 조성, 미디어아트 스트리트 운영 등이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향후 제주 야간관광 만족도 제고와 야간관광 소비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애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2020 온라인 제주감귤박람회

제주감귤, 새로운 도전과 희망!
코로나보다 강한 제주감귤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2020. 11. 27(금) ~ 12. 11(금)

제주감귤박람회 홈페이지(www.jicexpo.com)

온라인 행사

- 감귤박람회 라이브방송
- 온라인 감귤홍쇼핑
-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 감귤가공제품전
- 농기자재전

비대면 행사

- 귤빛가요제
- 감귤따기 체험
- 드라이브스루 감귤판매

비대면 전시관

- 감귤품평회 전시관
- 감귤가공제품 전시관

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감귤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사)제주감귤연합회,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